



전북 익산시 한 농가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으로 판명된 가운데 25일 나주시 공산면 복용리의 양계단지에서 AI예방을 위해 분무방역을 하고 있다.

## 전남 10개 市郡 67농가 '익산 양계장' 직접 접촉

〈AI 발생지〉

최근 한달새 병아리 분양·왕래...道, 특별예찰

전북 익산의 양계장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된 가운데 전남에서도 최근 한 달새 모두 67개 농가가 이 양계장을 통해 병아리를 분양받았거나,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이에 따라 이를 농가에 대한 특별예찰을 실시하고 방역초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는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26일 전남도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익산의 양계장에서 발견

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역학검사 결과 전남에서는 지난달 21일 이후 현재까지 13개 지역 67개 농가가 이 양계장을 통해 병아리를 분양받았거나,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 양계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분양받아온 농가의 경우 곡성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광이 7곳, 나주와 영암이 6곳, 담양·함평·장흥이 각각 5곳씩이었다. 또 보성 3곳, 화순과 순천 2곳, 강진·무안·장성·구례 각 1곳이었으며,

이들 55개 농가에서는 모두 223만6천 300마리의 병아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료를 공급하거나 계란을 수집하기 위해 차량으로 익산 양계장을 왕래했던 농가는 나주 5곳, 영암과 영광 각각 2곳, 함평 1곳 등 10곳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닭·오리 가공업체인 하림 백신팀이 최근 나주와 함평 1곳씩의 농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림 계열 농장 134곳 가운데 절반이 AI가 발견된 익산의 양계장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행기자 redplane@

## 익산AI, 사람 전염 '고병원성'

지난 22일 전북 익산 양계장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위험성이 크고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혈청형 H5N1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최종 판명됐다.

농림부는 지난 25일 국립수의검역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익산 양계장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H5N1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서 지난 2003년 12월 이후 3년 여만에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다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매뉴얼에 의거,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 반경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6개 농가 23만 6천마리의 닭과 오리에 대한 살처분을 26일부터 시작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

## 과격 폭력시위 끝장내자

# "지금이 독재시대냐" 외면 넘어 분노

국민 81% "시위 폭력적" 반감

툭하면 도로점거 서민생계 위협

라고 말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시위의 중심 무대였던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의 상인들은 민주화라는 명분이 있어 10여년 이상 피해를 봄에 견뎌냈지만 이제는 폭력시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툭하면 대로를 막아 차량 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위에 더 이상 호응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다.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방법으로, 법을 어기는 폭력 시위로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 저지 대회 참가

자들은 지난 22일 불강통과 각축으로 무장한 채 광주시청을 습격해 유리창을 파손하고 돌을 던지는 등 80년대 반 군부독재 시위를 복불케 했다.

광주시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FTA 저지대회까지 부서진 시청 관련 시설을 현장 보전하고 26일 청사와 시내 주요 도로 등 15곳에 '시민의 재산인 시청사를 파괴한 행위를 광주시민은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일제히 내걸었다.

이제 국민은 불법시위가 삶이다. 길을 막고, 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붓는 폭력시위가 이제는 지겹다.

운동권의 대부인 학세웅 신부가

공동위원장인 '평화작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응답자의 81.2%가 현재의 시위문화에 대해 '폭력적'이라고 답한 것이다.

법을 무시한 불법동이라는 응답도 72.6%나 됐다. 또 우리나라의 평화·준법 시위 정착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정착됐다'고 보는 응답자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이 도심에서 벌어지는 시위나 집회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확인된 것이다.

윤장현 광주·전남비전21 이사장은 "FTA는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의 폭력시위는 흐음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주장의 정당성마저 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盧대통령 '與·野·政 정치협상' 제안

### 한나라 부정적...오늘 결론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해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4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에 각종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향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에 대해서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노 대통령이 이번 정치협상을 통해 국회에서 1년 이상 지체

되고 있는 각종 주요 민생 법안, 국가 개혁 입법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는 물론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여야 교섭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여·야·정 정치협상회의의 구성 주체는 정부 측에서 노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정치권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대표 및 원

내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은 한차례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전 해소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에 앞서 이 실장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현길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노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제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일단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박재완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의 정치협상회의 제안에 대해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과 긴밀히 전화협의를 가졌다"며 "일단 27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ALL LASH MASCARA

